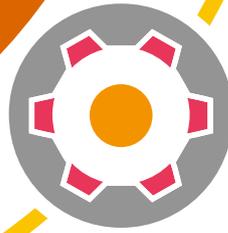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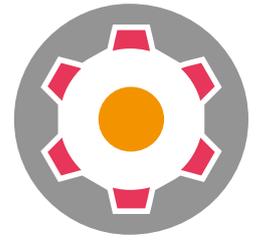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Contents

- I. Intro: S in ESG
- II. ‘S(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
- III.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I. Intro: S in ESG

글로벌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아젠다를 이해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ESG 전략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ESG에서 'E(환경)'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ESG 요소 중 'E(환경)'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S(사회)'와 'G(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6.7%와 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ESG 중 'E(환경)' 요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대상 조사: ESG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그림1. 글로벌 기준 ESG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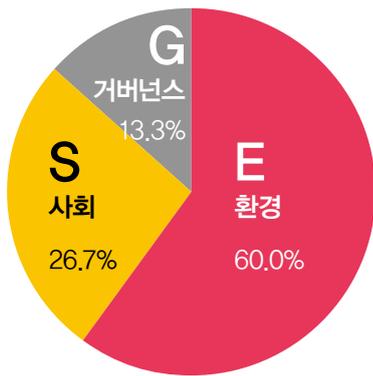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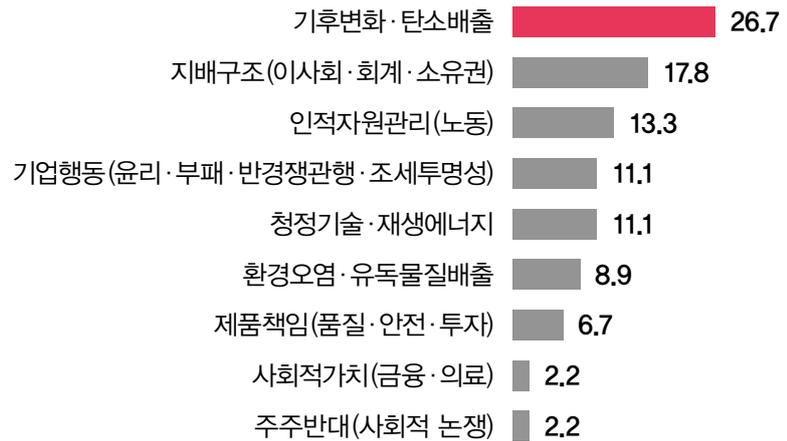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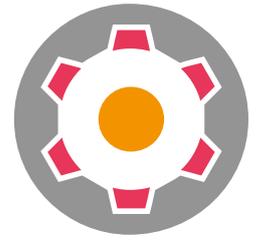


그림2. ESG 평가지표*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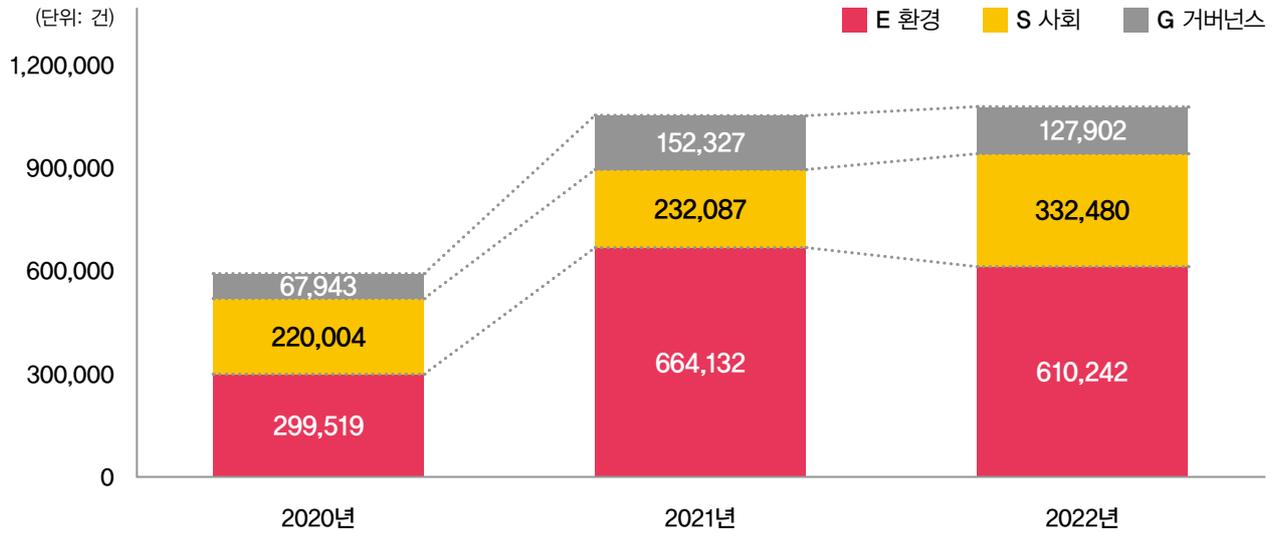


* MSCI 평가지표 참조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 ESG 경영·투자 확산 대비 한국 기업 대응현황 및 주력산업 전망, 2021.2.5



최근 3년간 ESG 요소별 언급량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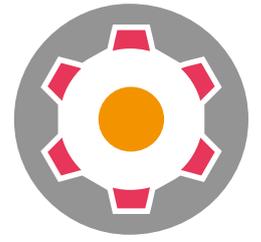


출처: KPR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소, 2023년에 주목해야 할 ESG 키워드

한편, E(환경)만큼은 아니지만 ‘S(사회)’ 이슈도 최근 급격히 기업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들이 원청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전 공급망 내 인권 현황 공시 의무화를 발표한 것이 그 예이다.

ESG 중 ‘S(사회)’의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S(사회)’의 목표는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ESG 공시 기준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ESG 전략을 살펴보면, ‘S(사회)’는 인권, 노동, 소비자, 노사관계, 다양성, 포용성, 사무실 및 작업장 안전(산업재해발생률), 개인정보보호, 공급망 관리,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아동노동 등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S(사회)’의 영역에서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인데, 국내외 규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계열사, 협력사, 하청업체 등 전체 공급망에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리스크와 평판 이슈를 줄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II. ‘S(사회)’ 관련 국내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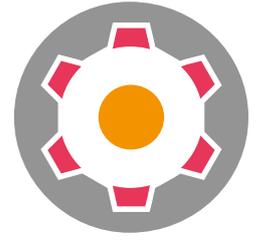
1. 글로벌 주요 동향

글로벌 주요 ESG 공시 기준들이 연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기관인 ISSB는 일반 요구사항 S1과 기후관련 공시 기준 S2 발표 이후,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다른 E(환경) 분야와 인적자원 및 공급망 내 인권 문제 등의 S(사회) 영역의 공시 기준도 제정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EU 역시 올해 초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발표하였으며, CSRD 실행을 위한 공시 기준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서도 ‘S(사회)’ 관련 공시 기준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EU 기업과 비EU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해당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EU 수출기업, 수출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협력 업체까지 간접 영향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자회사와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및 인권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고,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다시 협력 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게 이행하는 방식의 다단계식 관리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U는 지침을 위반한 기업에게 EU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의 행정제재, 피해에 대한 민사 책임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1 ESRS S1: 종업원, ESRS S2: 공급망 내 근로자, ESRS S3: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 ESRS S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지침 적용 대상 기업

EU 기업

[그룹 1]

- 직원 수: 500명 이상
- 매출: 글로벌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

[그룹 2]

- 직원 수: 250명 이상
- 매출: 글로벌 연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이며,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²에서 발생

비EU 기업

[그룹 1]

- 직원 수: 해당 사항 없음
- 매출: EU 역내에서 연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

[그룹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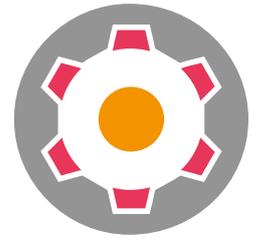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 직원 수: 해당 사항 없음
- 매출: EU 역내에서 연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이며, 순매출의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출처: PwC, Corporate Sustainable Due Diligence Directive – A focus on your entire value chain

주요 국가의 'S(사회)' 관련 규제 현황

- **노르웨이:** 기업 투명성과 인권,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된 법률 통과
-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하였으며, 2023년부터 실시
- **호주:** 노예 방지법 검토 중 (공급망 내 현대 노예제 리스크 현황 평가 등)
- **영국:** 현대 노예법 (UK Modern Slavery Act)
-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
- **미국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법
- **미국:** 노예제 근절기업 인증법,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강제노동 의심 지역 수입 물품의 통관 보류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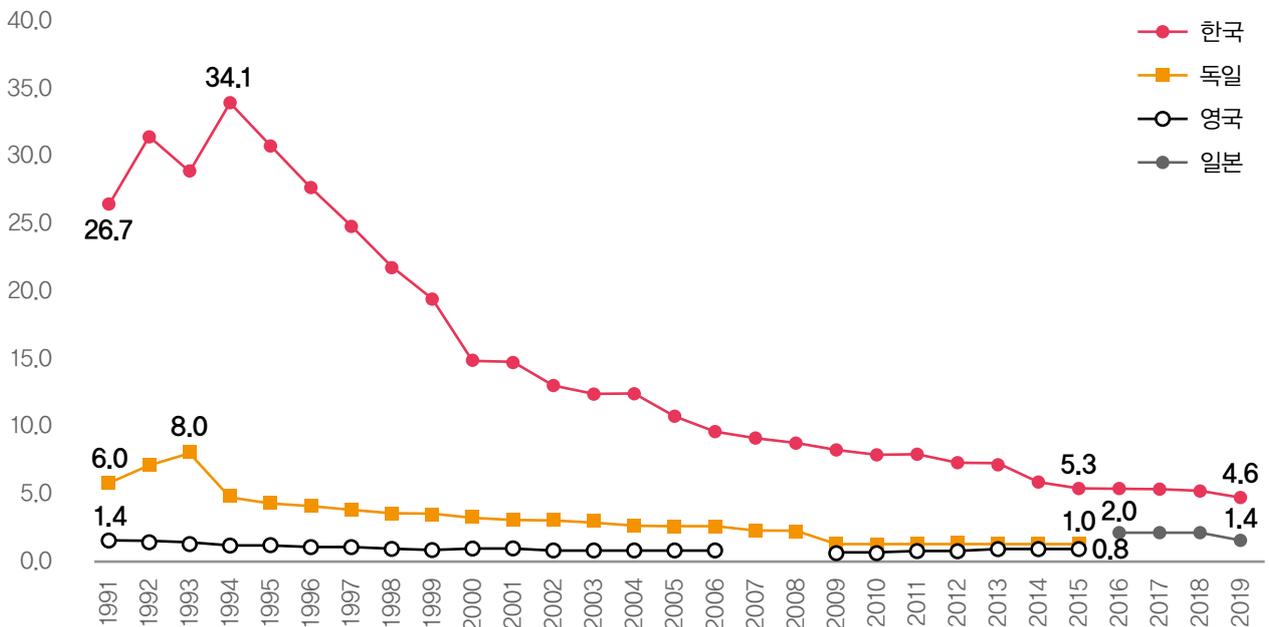
2 고위험 산업군: 섬유·가죽 생산 및 유통, 옷·신발 등 패션 분야, 농축수산물·식품업,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생산, 철강 생산·유통 등



2. 국내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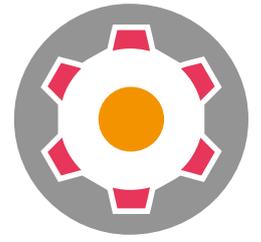
해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내 또한 기업의 'S(사회)'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S(사회)' 관련 이슈 중 국내 기업에게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중대 재해'이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4개국의 중대 산업 재해 발생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재해 특성 상, 전체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업체 비중이 81%를 차지하여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더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의 비중이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업', '의류 및 패션' 업계의 공급망에서도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국내에서는 '중대 재해' 이슈를 중심으로 규제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³하는데에 성공한 '위험성 평가 제도'를 개편할 것을 발표하였다.

한국, 독일, 영국, 일본 4국의 중대 산업 발생 현황: 10만 명당 산업재해 발생자 수 추이



출처: 박종식, 산업안전보건 정책 방향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2022.4월호,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장 점검의 날(2.8) 운영, 2023.2.8

3 영국: ('74) 0.34 → ('18) 0.08, 독일: ('94) 0.42 → ('20)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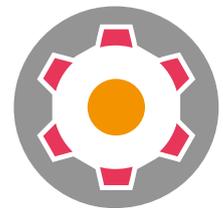


III.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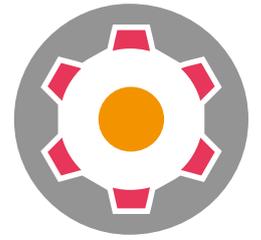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해외 주요 규제기관들은 기업의 전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S(사회)’ 관련 리스크 (인권, 산업재해 등)를 파악할 수 있는 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1위 응답이 ‘공급망 ESG 실사 대응’이었다. 그 원인으로, 기업 공급망 내에 환경 문제, 인권 침해 여부 등 ESG 경영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⁴하였다. 결국 국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또 국내외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사회)’ 관련 이슈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 기업에게 협력업체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되었으며, 협력업체들이 기업의 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업의 ‘S(사회)’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PwC는 글로벌 주요 규제 기관의 공급망 인권 정보 요구는 분명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는 과정(공급망 관리 정책 변경 및 수립, 데이터 수집, 주기적인 모니터링, 공시 준비 등)에서 기업의 평판 위험이 감소하고, 소비자 및 임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가능해져 결국 산업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PwC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또 자회사를 포함한 직·간접 협력업체와 공유하여 어떻게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4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ESG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2023.2.5



1. '전사적 인권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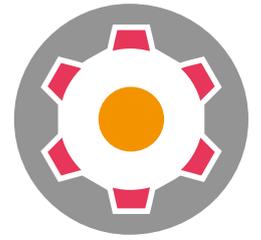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먼저, 'S(사회)' 영역의 주요 과제들은 대부분 인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산업별 또는 자사의 현황에 알맞은 '전사적 인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UN의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또는 OECD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정책 수립을 한다면, 원청 기업을 포함한 전 공급망 내 협력 업체가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전사적 인권 정책'은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인권 침해, 산업재해 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재무적 손실,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평판, 인력 채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S(사회)'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급망 전략 수립 단계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이상 단일 기업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PwC는 기업을 둘러싼 전 공급망을 관리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여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 전략 수립의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공급망 전략 수립의 5단계

1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전사 협업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1차~3차 직·간접 협력 업체 데이터 포함)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대응 위한 '전사 협업팀 CFT(Cross-Functional Teams)' 신규 구성 또는 기존의 조달팀에 추가 인력 배치 등 고려
2	공급망 행동 규범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 업체들이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원칙 사항이자 가이드라인 수립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순간의 '대응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필요
3	'원칙 준수'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필요 원청기업이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식·네트워크 공유, 우수 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시스템 구축 위한 공동 투자 등 고려
4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사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의무를 전 공급망에 적용 업체 피드백을 통해 개선 여부 검증하며 지속적인 공급망 관리
5	산업별 이니셔티브 참여 및 협력의 기회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하거나 각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급망 관리 및 신성장 기회 추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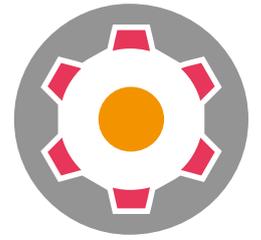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공급망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전사 협업팀 구성

기업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1차 협력 업체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의 또 다른 공급 업체(2차 및 3차 협력 업체 등)까지 모두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전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단순히 공급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다양한 부서의 인원이 포함된 '전사 협업팀 CFT(Cross-Functional Teams)'를 구성하거나 기존 조달팀에 추가 인력 배치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구축 등의 신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직·간접 공급망 관계도



* 3차 협력 업체(Tier 3)은 원청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지만, 통상 여러 공급망 단계를 걸쳐 위치해 있으며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다. 3차 협력 업체(Tier 3)에서 원자재 부족난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연쇄 작용으로 인해 그 파급효과가 원청기업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



2

공급망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 수립

기업이 수립한 '전사적 인권 정책'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급망 행동 규범(Supplier Code of Conduct)'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행동 규범은 원청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 사항이자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통해 'S(사회)' 관련 이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업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며, 공급업체와 함께 주요 위험 영역을 평가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조치로는 크게 '사전 예방'의 형태와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대응 절차'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 조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3

'원칙 준수'에서 '협력 관계'로 발전

원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내 협력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협력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현 공급망을 제대로 파악하여 필요한 변화를 꾀할 수 없으며,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문서화된 계약서와 의례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협력 업체와의 진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적인 전략과 실행방안(기술 지도, 지식 공유, 공개 행사, 네트워크 공유 등), 업체들과 끊임없는 대화, 그리고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가 있는 업체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 데이터 수집과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의 투자가 필요하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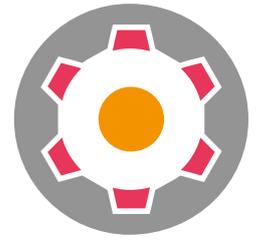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실사와 검증

기업의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권 실사 의무를 전 공급망에 적용해야 한다. 기업은 먼저 구매 비중, 위치 등을 기준으로 협력업체를 분류하고, 협력업체들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인권 개선 여부를 검증해나가면서 공급망을 관리해야 한다. 협력 업체 내부에서 실제 드러나는 문제점이 없다하더라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는 필수적이다. 또한, 협력 업체의 활동이 소속 직원,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고충 처리 제도'가 실사와 검증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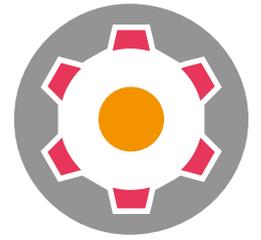
산업별 이니셔티브 참여 및 협력의 기회 추구

비즈니스 현장에서 산업별 공동의 표준, 접근법, 책임 등을 함께 마련할 경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산업별 주요 글로벌 기업 또는 민관이 협력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계획과 규범을 만들어가는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이 속한 산업 내 이니셔티브를 참고하여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공급망 정책 수립 시 각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꾀하고 및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별 이니셔티브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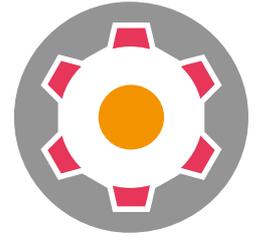
산업 구분	이니셔티브	비전	특징
전자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근로자, 환경 및 비즈니스를 위한 지속가능한 가치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관리 시스템 – 공급망 내 근로자 인권 보호, 업무 관련 재해 및 질병 발생 최소화 • 행동 규범 범위에 회원사 1차 협력사 포함 • 가입 기업: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200개 이상의 핵심 회원사 보유(세계 최대 규모)
	RMI Responsible Mineral Initiative	광물 공급망이 전 세계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분쟁 광물을 비롯해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가 채굴되는 국가와 지역, 채굴 기업, 유통 기업 등의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 및 채굴 과정 모니터링 • 가입 기업: 애플,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
바이오 의약 제약	PSCI Pharmaceutical Supply Chain Initiative	글로벌 제약 및 의료 공급망 전체에 대한 안전, 환경 및 사회적 결과의 우수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범 윤리, 노동, 보건 및 안전, 환경 및 시스템 – 동물 복지, 환자 안전 및 정보열람 권리 보호, 공정 안전 등 • 실험·생산 구역,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에 대해 공급망 심사 후 개선할 의무 • 가입 기업: SK바이오팜, 존슨앤존슨 등
화학	TfS Together for Sustainability	글로벌 공급망의 작업 및 환경 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안전보건, 노동·인권, 지배구조 측면에서 실시 진행 – 에코바디스 공급망 평가 및 TfS와 제3자 평가기관의 심사 2가지 모두 채택 • 가입 기업: BASF, Henkel 등
자동차	Drive Sustainability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가치사슬(밸류체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공급망, 원료, 순환 가치사슬, 탄소중립, 직원 복지 – 원료 리스크 대응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 표준화 프로세스 도입 • 경쟁법 원칙 자체 평가로 자가 점검 지원 • 가입 기업: 메르세데스-벤츠, BMW 그룹, Ford 등
정보 통신	GeSI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책임감 있고 실현가능한 디지털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세상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 건강, 환경 • 공급망 업체들이 ESG 경영 현황을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웹 기반 자가진단 도구 제공 • 가입 기업: AT&T, T-Mobile 등



기업이 속해 있는 업계의 단체 및 협회 등과 함께 민관협력사업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예를 들어, 인권 탄압과 면화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인 Better Cotton Initiative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는 ‘인권 중심’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공동의 목표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해외 주요 기업의 공급망 관리 우수 사례

산업	기업명	내용
건설	ACS 그룹	<p>전 공급망 대상 ‘보건 및 안전’ 캠페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제일주의 문화 확산 및 임직원 자발적 참여 도모 • 각 사업장별 안전 시스템 정책 수립·실행 후, 가장 우수한 사업장에 3개월 간 ‘Capture the Flag’ 수여 및 인센티브 제공
상사	Ashhead 그룹	<p>고객 및 협력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및 협력사의 안전 팀과 협력하여 특정 작업 현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장비의 안전한 사용 시연 및 교육 세미나 운영 • 북미 전역의 75개 시장에서 전임 안전 강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에는 18개의 공인 교육 센터 보유
패션	LVMH	<p>자사 규정 ‘유해 화학 물질 표준’에 따른 공급 업체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ZDHC의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ZDHC MRSL)을 활용하여 사용 제한 유해 화학 물질 규제를 전 공급망으로 확장 • LVMH사가 정한 별도의 사용 제한 물질 목록을 선정하여,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공급 업체를 선별 후, 최종 평가 테스트 진행을 통해 LVMH사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공급업체는 계약 거부
호텔 & 레저	AWC	<p>공급업체 관리 시스템 구축: VRM(Vendor Relationship Manag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사의 성과를 평가하여 가장 최고 점수를 획득한 협력사에게는 향후 입찰·협상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공



본 보고서는 PwC 글로벌의 ‘Spotlight on the ‘S’ in ESG’와 ‘The S in ESG: Spotlight on the social element of supply chains’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Contacts

**PwC Korea
ESG Platform
Leader** **스티븐 강 Partner**
steven.c.kang@pwc.com
+82-2-709-4788

삼일PwC	Assurance	Tax	Deals
	권미엽 Partner miyop.kwon@pwc.com +82-2-709-7938	심수아 Partner sooa.shim@pwc.com +82-2-3781-3113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82-2-3781-2501
	이진규 Partner jin-kyu.lee@pwc.com +82-2-3781-9105	김홍현 Partner hong-hyeon.kim@pwc.com +82-2-709-3320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82-2-3781-2340

PwC컨설팅 **윤영창 Partner**
youngchang.yun@pwc.com
+82-2-709-335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report

**삼일PwC
Markets** **장은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82-2-3781-0057

윤이나 Manager
ena.yun@pwc.com
+82-2-709-8539

